

## 국가균형발전의 평가와 향후과제

박 양 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 1. 요소투입형 불균형전략의 한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모델은 ‘혁신주도형 균형 발전 모델’이다. 이는 혁신주도형 발전축과 균형발전축을 상호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지향하는 접근모델이다.

먼저 혁신주도형 발전 모델에서는 ‘혁신요소의 투입’을 중요시 한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모델과는 차별화된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추진되었다. ’95년 1인당 GDP 1만 불을 달성하였으나 이러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전략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즉 산업화 모델은 노동, 자본,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성장을 유도하는 양적 시스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요소투입형 산업화 모델을 적용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의 질적 구조가 변혁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이행하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기술 등 고도의 첨단기술이 중요시되면서 노동, 자본,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만 의존하는 모델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이 힘을 발휘하게 된 새로운 생산요소가 바로 ‘혁신’이란 생산요소이다. 혁신이란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마케팅, 새로운 전략과 제도를 포괄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의미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바탕이 되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은 이미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 국가는 혁신주도형발전을 추구하

고 있으며 혁신의 질을 제고하고 그 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인 ‘균형발전’ 모델은 극심한 국토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으나 정치·경제·행정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폐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 비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국제도시간 삶의 질 평가에서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 자본의 유출로 자립적 발전의 토대가 미약한 실정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압축적 산업화에 따라 야기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의 지속적 침체현상은 국가경쟁력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다. 이는 요소투입일변도의 경제성장전략과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개발방식의 채택에 따른 결과이다. 수도권으로의 일극집중형 국토공간으로부터 탈피하여 전국 각 지역이 특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하는 다극분산형 국토공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지방분산-수도권의 질적 발전이라는 삼위일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이 바로 ‘균형발전’ 모델이다.

이렇듯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혁신주도형 발전과 균형발전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유하며 특성화된 상향 발전을 유도하는 혁신주도형 균형 발전을 그 기본모델로 선택하고 있다.

##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이

### 가.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전략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적극적 지방화 정책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새로운 국부창출의 근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는 첫째,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이며 둘째, 농(農)·도(都)상생형 국토공동체의 형성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정립되었다.

첫째, 다극분산형 국토공간의 창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구축, 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하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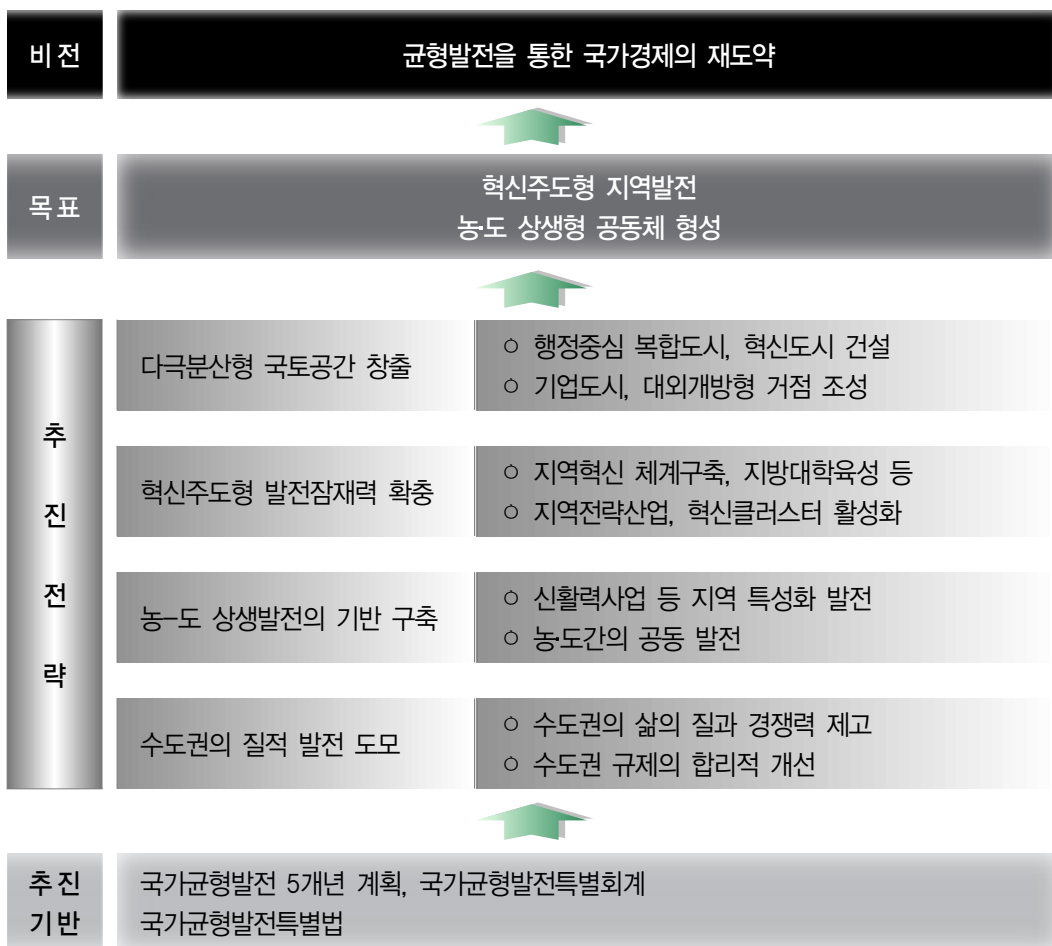
둘째, 혁신주도형 발전잠재력의 확충이다. 이는 혁신을 통한 자립적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 인재양성,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셋째, 농·도 상생발전의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신활력지역의 특성화 발전 지원 및 도·농간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농촌소득 증대와 도시민의 농산어촌으로의 U턴과 정착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넷째, 수도권 지역의 질적 발전이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안정화, 삶의 질 향상, 규제개선을 통한 질적 발전을 추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광역권을 실현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체계 정립, 투자재원과 전담기관의 구축, 법적 기반 마련 등 3위일체적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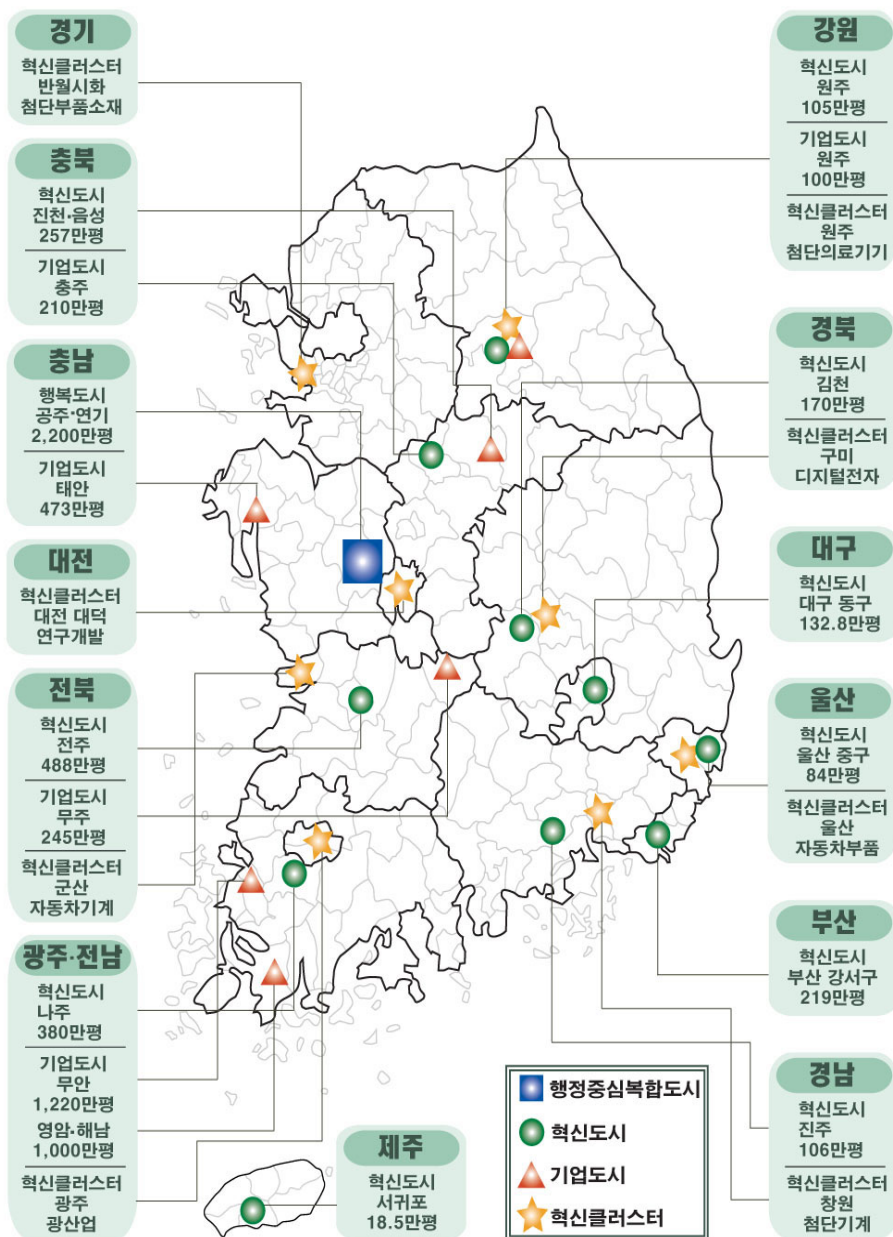
● 그림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 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콘텐츠

지난 3년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발전정책의 선도 프로젝트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혁신 클러스터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국토를 리모델링 하고 있다 <그림2 참조>.

● 그림2. 국가균형발전과 국토리모델링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선도프로젝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공모작 결정, 건설청 개청 등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9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의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2005년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거의 완료중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였다. 향후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 등 혁신주체와 연계를 통한 혁신거점 육성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 6월 176개 공공기관의 12개 시·도로의 분산 배치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자체별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입지선정 지침마련 및 관계기관 간 이행기본협약 체결을 거쳐 2005년 12월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지정 및 추진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의 특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효과와 생산·연구·교육기능을 연계시키는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5년 8월에는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17조 6,452억 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둘째, 자립적, 역동적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계구축, 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내 주요시책에 참여하고, 상호 학습을 통한 지역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 116개의 기초 시·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지역혁신박람회 개최(2006년 11월에 제3회), Inno-Cafe 운영 및 지역혁신리더 육성과정을 통해 이너베이터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16개 광역시도 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4+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덕특구 지정과 7개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으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적극적 육성을 위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 우수사업단(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 참여)에 5년간(2004~2008년) 약 1조 4천억원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 333개의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고, 기업형 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해 35개 대학에 학교기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낙후지역을 역동적·자립적 활력지역으로 재편하기 위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고시하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70개 신활력지역에 대해 3년간 총 9천억 원(지방비, 민자 포함)규모의 예산을 지원 중이다. 현재 시·군별로 자문 및 컨설팅을 담당할 지역혁신자문관(Family Doctor, FD)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지역 특성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31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1조 1,708억 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수도권외의 양적 팽창에서 혁신주도형 질적 발전으로 전환을 위해 2005년 6월에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질적 발전 패러다임 하에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삶의 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수도권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경관심의제, 녹지총량제, 녹지활용계약제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도권 3개 시도의 발전비전 및 전략 설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개 지역특화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화 정책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추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25개 첨단 외투기업 및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택지개발 합산규제,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넷째, 균형발전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법, 균형발전5개년계획,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대학, 지역전략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 균형발전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정책을 체계화하고, 특별회계 신설·운영을 통한 재정적 뒷받침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공동학습하고 혁신활동을 협의·조정하고 있다.

## 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 : 특성과 성과

### 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7가지 특성

이들 국가균형발전비전과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7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지역불균형으로는, 또한 더 이상의 수도권 과밀로서는, 나아가 더 이상의 지방의 침체로서는 새로운 경제 도약이 어렵다는 인식에 뿌리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 ‘성장’을 동반한 균형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장을 장착한 균형발전전략’, 또는 ‘균형발전을 장착한 성장전략’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혁신자체를 새로운 생산요소로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과거의 성장방식은 생산요소, 즉 노동, 자본, 토지 등 물리적 요소 투입방식에 의존하고 수도권 위주의 개발 방식이었다. 이는 요소중심형 불균형 성장방식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기술발전과 자원활용에 있어서 미래 국토의 총체적 생산성을 야기할 수 있는 혁신주도형 성장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는 상생발전의 특성을 지닌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상생을 중시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내의 소단위 지역간 상생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는 국가균형발전이 BUG(버그)네트워크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Business-University-Government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변혁을 일구어가는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이 산업부문, 정부부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촉매역할을 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해외에서도 이 접근방식을 호평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은 '상향적 특성화'로 가는 전략이다. 균형발전이 '하향평준화'로 물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전략적 의미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2만 달러, 3만 달러시대로 효과적으로 올라가는 의미를 지닌다. 성장을 장착한 균형발전, 혁신주도형 발전, 특성화 발전 등 이 모든 전략을 볼 때,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성장을 동반하는 '상향적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는 국가균형발전이 장차 동북아시대와 한반도시대를 염두에 두고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동북아시대에 대륙과 해양으로 동시 진출입이 가능한 한반도의 무한한 지정학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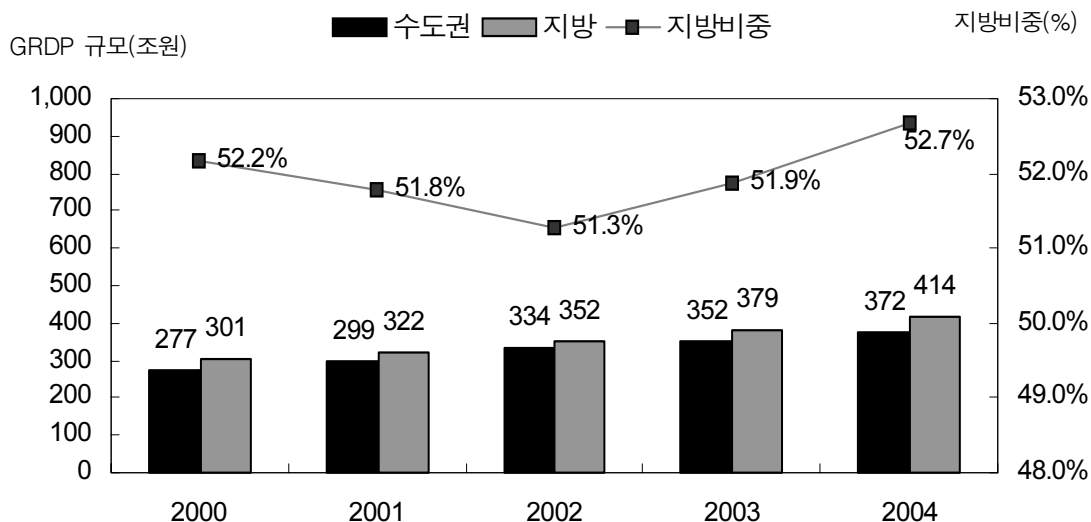
일곱째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과거처럼 중앙정부 독주의 방식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 간에 협력을 통한 계획과 집행방식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 나. 주요 지표의 추이

참여정부 출범후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국가경제 기여도 증가, 자립형 지역경제의 토대 구축,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산학협력 활성화,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5년의 균특회계 증가율은 8.8%로서 2005년 총지출 증가율 6.4%를 상회하며, 균특회계 증가 규모는 2005년 5.5조원에서 2009년에는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지방의 지역내 총생산액(GRDP) 비중이 2002년(51.3%)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 들어 51.9%, 2004년에는 52.7%로 계속 증가세로 전환됨으로써 지방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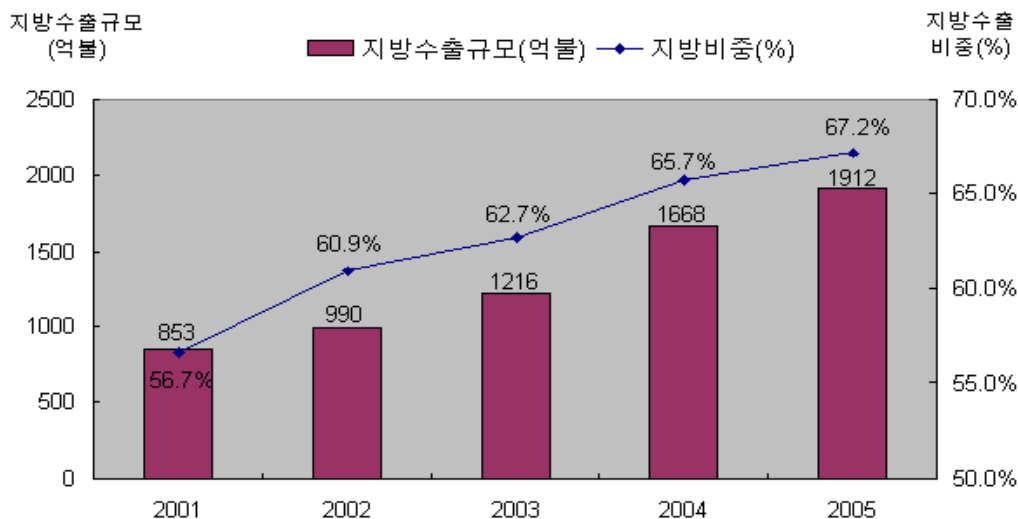
● 그림 3.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내 총생산 추이 ●



자료 : 통계청(20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전체 수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56.7%에서 2003년에는 62.7%, 2004년 65.7%, 2005년에는 67.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참조>.

● 그림 4. 지방의 수출 비중 ●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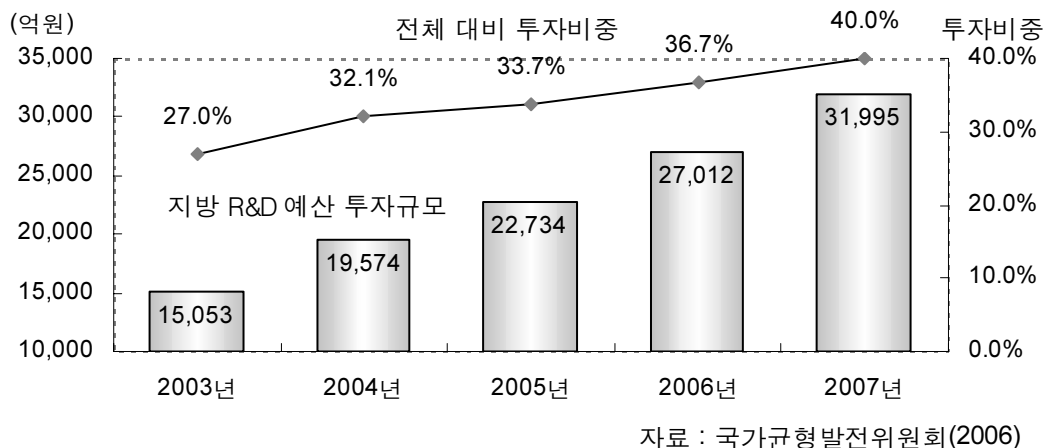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5월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2000~2003년과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참조>.

● 그림 5.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추이 ●



그리고 지방의 산학협력 활성화로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의 혁신역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 정부 연구 개발투자도 계속 증가추세이다. <그림 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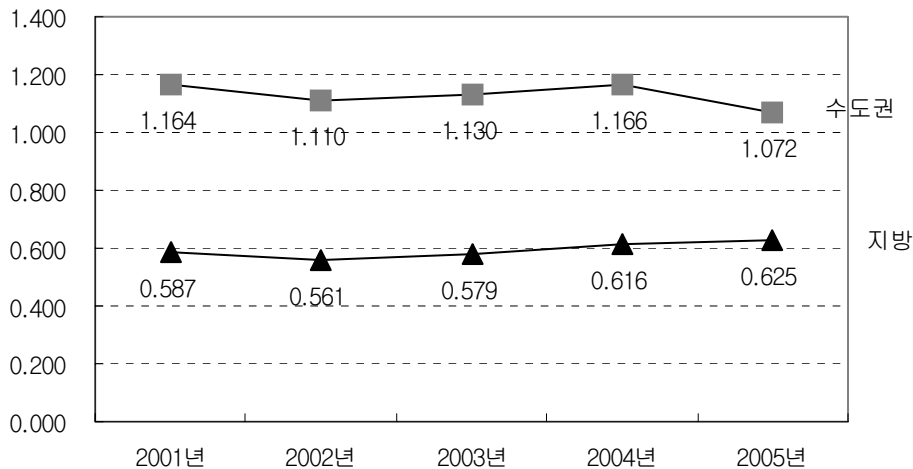
● 그림 6. 정부 R&D 예산 중 지방투자 비중 추이 ●



지방의 재정력 지수도 2003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격차도 2002년 0.53에서 2005년 0.45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7 참조>

● 그림 7. 지방의 재정력 지수 추이(수도권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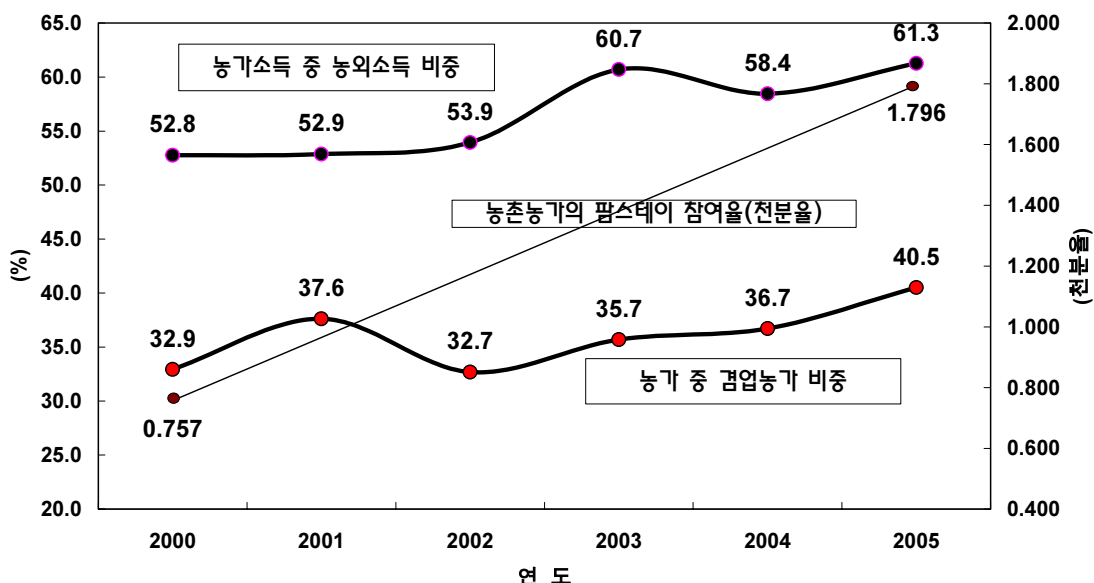
재정력지수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최근의 농촌경제도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의 비중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의 53.9%에서 2005년에는 61.3%로 증가하고, 농가 중 겸업농가의 비중도 2002년의 32.7%에서 2005년에는 40.5%로 상승했다. 이는 농촌경제가 다각화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촉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농가의 팜스테이 비율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은 주5일 근무체제와 맞물려 도농상생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을 시사한다.

● 그림 8. 최근의 농촌경제 변화 ●



자료: 김창현 (2006.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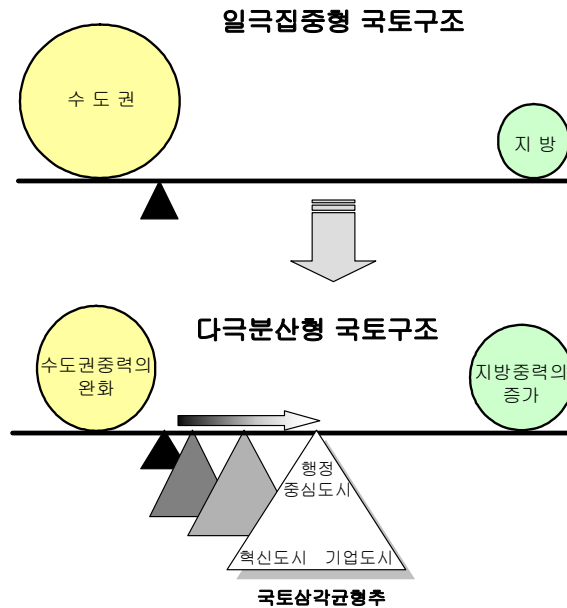
## 다. 국토균형추의 기초마련

국가균형발전은 국토균형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수도권이 국토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95%를 차지하고 지방은 그것의 겨우 5%만을 차지하는 이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함이 급선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 지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소진시키고 있는 형태가 지금의 수퍼모노(Super-Mono) 형태의 일극집중형 국토구조이다. 이를 다극분산형의 구조로 변환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가중상승시키고 살기 좋은 ‘창조적 국토공간’으로 비상할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 가는 기반을 닦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거점지역에 국토의 재편성을 선도할 수 있는 다수의 전략적 국토균형추(錘)를 창조해야 한다. 이는 마치 저울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무겁고 다른 한쪽은 지나치게 가벼울 경우 저울추를 이용하여 균형을 잡는 것과 유사하다. 이 경우 저울추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토균형추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각구도로 구축되고 있다. 이는 ①충청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②공공기관이전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도시군(群), 그리고 ③기업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전략적 기업도시군(群)으로 구성된다. 이의 연계된 시스템적인 실천 전략이 요구된다.

● 그림9. 국가균형발전과 국토삼각 균형추 ●



자료: 박양호(2006.7)

## 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단계와 향후과제

### 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천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천은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10 참조>.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1단계로서 '제도구축기'에 해당한다. 2004년은 2단계로서 '정책개발기'에 해당한다. 3단계는 2005년으로써 '정책집행기'에 해당한다. 이어 2006년이후는 제4단계로서 '성과확산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전반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구축과 정책개발기」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선도프로젝트와 정책을 개발한 기간에 해당된다. 또한 전반기는 대체로 국토 공간구조의 재편성을 위한 주춧돌을 만든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림 10. 국가균형발전의 실천단계 ●

| 1단계<br>(2003) | 2단계<br>(2004) | 3단계<br>(2005)              | 4단계<br>(2006년 이후) |
|---------------|---------------|----------------------------|-------------------|
| 제도구축기         | 정책개발기         | 정책집행기                      | 성과확산기             |
| 전반기           |               | 후반기                        |                   |
| 정책기획 및 개발     |               | 정책의 안정적 집행과<br>균형발전의 확대체계화 |                   |

참여정부 후반기는 「균형발전정책의 안정적 집행 및 확산기」로서, 전반기에 만든 정책을 착실하고 안정되게 집행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또한 후반기는 대체로 국토구조의 리모델링을 위한 기능과 외형을 만드는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주거 및 환경에 얽매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열악한 상태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에 실려있는 요구를 수용하고 일상서비스의 질과 선택에 관한 국민의 점증하는 기대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민권’을 행사하려는 열망은 주거, 환경, 학교, 복지, 교통, 문화, 안전 등 제반 영역에서 분출되고 있다. 따라서 후반기 중에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국토 어디에 살더라도 선진적 삶의 질이 보장되고, 지역간 삶의 질적 기회가 균등한 국토를 재창조하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동시에 한반도 공간구조의 큰 틀 속에서 남북한의 새로운 교류 영역과 동북아 공동체 구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참여정부의 후반기에는 균형발전과 정책의 주안점을 정책의 안정적 집행과 성과의 확산으로 두되, 정책의 영역을 ‘국민의 삶의 질’과 ‘한반도 공간구조’로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국토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시현할 필요가 있다.

## 나. 향후과제

향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

어야 한다. 첫째, 균형발전 성과의 확산 및 통합체계의 강구, 둘째,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추진, 셋째, 국민과의 소통 확대, 넷째, 다양한 파트너십의 실천, 다섯째, 지역갈등의 해소, 그리고 여섯째, 균형발전 특성에 근거한 평가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 1) 균형발전 성과의 확산 및 통합체계 강구

참여정부 전반기에 이룩한 균형발전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상태에 대한 부처별·지자체·관련주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지속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 및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균형발전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균형발전의 통합의 실천적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관련 선도정책 등이 통합되고 연계되어 균형발전 성과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주민참여를 통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추진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주민참여를 근본으로 하고 주민의 주도하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 시민단체, 지역연구소, 지자체가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실태와 과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채널을 개발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학회, 시민단체 등의 정책연구·정책제안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학습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3) 국민과의 소통 확대

균형발전정책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새로운 미래과제를 기획·집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대화 및 공감대 형성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소의 정책설명 기회를 강구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반영결과에 대한 지역사회 설명기회도 강화하여 주민참여형 정책모니터링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 4) 다양한 파트너십 강구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민간, 지역간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간의 지역발전 협약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컨소시엄 추진을 통합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5) 지역갈등의 극복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에 따른 지역간 갈등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선택과 집행의 특별성·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 기준의 설정 및 지역간 합의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간 협력에 의한 공동발전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지역간 협약과 컨소시엄에 의한 지역개발 방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 6) 균형발전 특성에 근거한 평가체계의 정립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책평가체계가 요구된다. 가령, 국가균형발전평가를 위해 서는 앞에서 논했듯이 국가균형발전특성중의 하나인 '성장을 장착한 균형발전'을 중요시함에 따라 '성장과 균형의 동반'관계에 근거한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이 특성 프레임에 근거한 관련 정책평가모델링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이플러스에드, 2006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2006년 6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성과보고, 2005년 11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 2004년 1월
- 김창현, “국토공간상의 농촌지역 변화 트렌드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정책브리프, 제104호, 국토연구원, 2006년 8월 28일
- 박양호, “국토의 삼각균형추와 혁신도시”, 월간 국토, 국토연구원, 2006년 7월
- 박양호, “국가균형발전의 특성과 균형발전의 확대를 위한 과제”, 월간 국토, 국토연구원, 2005년 12월
- 박양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학협력전략”,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대회, 2006년 8월
- 성경룡, 이수훈 외, 동북아시아의 한반도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년
- 한표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구축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년